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

정의, 민주당 제안 거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무산 민주당 '김건희 특검 상정'을

여야는 30일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의당에 제안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30일 법사위 전

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선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과 함

께 쌍특검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기 의원은 "간사 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요구한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법안의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

다"면서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께 공식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사위 상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소집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특검법 상정을 확정된 건 정의당이 이끈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상정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된다.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숙려기간이 4월 중순 이후라 그날짜가 되면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법사위를 밟아나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타협안을 정의당에 제시한 후, 3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내수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국언(뒷줄 오른쪽)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국정운영 부담 되지 않았으면"

대통령실 김성한(사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제 그러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민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법 마련돼야"

여가위 공청회에 정부·여당 불참 야당·시민단체 "실태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9일 일제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와 별도 지원방안을 규정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과 생존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당

장 국장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참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나 그 피해가 1945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더 깊게 상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특히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아들·딸 사회 생활에 흠이 될까봐 감춰왔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강제동원 피해 부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여성들의 별도 피해가 분명히 인지됐다. 강제동원 피해와 더불어 사기 피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분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국가가 적어도 준비하고,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개개인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면 자료에 의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진술을 근거로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4월 임시국회 합의... 내달 3~5일 대정부질문

여야는 29일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를 4월1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3~5일 진행한다. 3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4일은 경제분

야, 5일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의원 1명당 12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11명이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3일 오후 2시,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4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 총리 "5월 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안정적 방역 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

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적·국익 훼손"

제3차 변제안 의혹 등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요구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외교·안보·경제·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해 그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차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WTO 제소의 선제적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조치에 대한 경유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